

보도시점 : 2023. 7. 24.(월) 15:00 이후 (7.25.(화) 조간) / 배포 : 2023. 7. 24.(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 특별단속 12개월간('22.7~'23.7) 국토부 1,034명 수사의회 등 토대로 경찰청 전세사기 34개 조직 3,466명 검거(구속 367명)… 검찰청 '법정 최고형' 구형으로 엄벌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금년 말까지 연장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대검찰청(총장 이원석)·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1.18)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왔으며,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로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1차 '22. 7. 25.~'23. 1. 24. / 2차 '23. 1. 25.~'23. 7. 24.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22.7~'23.7)에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다.

* '20.1월부터 '22.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2,091건을 추출한 자료,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

□ 경찰청은 특별단속 12개월 간 국토교통부 수사의회 등을 토대로 총 1,249건·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1,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하였다.

-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597건→632건), 구속 인원 25.9% 상당 증가(158명→199명)하는 한편, 몰수·추징보전* 금액(법원 인용 기준)도 3,040% 증가(5.5억→172.7억)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다.

* 추가로 509억 상당(거래가액) 부동산 등에 대해 범죄수익보전 진행 중(검찰 청구 기준)

※ 동기간 대비를 위하여 1차 '22.7.25~'23.1.16, 2차 '23.1.25~'23.7.16 기간으로 집계

- 또한, 이번 2차 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등 4대 유형* 근절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 규정을 적용하여 엄단하였다.

* 악성임대인 등, 전세자금 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

□ 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기소·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하여 기소하는 한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 구속하거나 공범, 여죄를 입건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은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관련 사건의 모든 “구속영장 심문”에 참여

-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있다.

* 성남지원 징역 15년(피해자 110명, 피해액 123억 원) / 서울중앙지법 세모녀 사건 징역 10년(피해자 85명, 피해액 183억 원, 추가 사건 별건 재판 계속 중) 각각 선고

□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절차의 전(全) 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 (별첨) 1. 국토교통부 세부 보도자료
2. 경찰청 세부 보도자료
3. 대검찰청 세부 보도자료

담당 부서 < 수사의뢰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책임자	단 장	김성호	(044-201-3589)
		담당자	팀 장	박태진	(044-201-3606)
			사무관	허예원	(044-201-3595)
담당 부서 < 기소 >	대검찰청 형사1과	책임자	과 장	임일수	(02-3480-2260)
		담당자	검 사	송규영	(02-3480-2905)
담당 부서 < 검거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책임자	총 경	김종민	(02-3150-2037)
		담당자	경 정	김현수	(02-3150-2168)
담당 부서 < 실거래 조사 >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책임자	처 장	박창일	(053-663-8760)
		담당자	부 장	최문기	(053-663-8610)

보도시점 : 2023. 7. 24.(월) 15:00 이후 (7.25.(화) 조간) / 배포 : 2023. 7. 24.(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 국토부, 특별단속 기간('22.7~'23.7) 중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등 분석 통해 전세사기 의심 1,034명 수사의뢰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금년 말까지 연장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대검찰청(총장 이원석)·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1.18)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왔으며,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로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1차 '22. 7. 25.~'23. 1. 24. / 2차 '23. 1. 25.~7. 24.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22.7~'23.7)에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다.

* '20.1월부터 '22.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2,091건을 추출한 자료,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

- 전세사기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분양·컨설팅업자 48명도 포함되어 있다.

□ 국토교통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하여 전세사기 의심 건을 선제적으로 수사의뢰해나갈 계획이다.

* (1차 기획조사, '23.1~'23.5) 의심사례 9천건 중 조사대상 선별 후 2,091건 정밀조사 완료→ (2차 기획조사, '23.하반기~) 의심사례 4만건 중 추가 조사대상 선별하여 정밀조사 추진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광범위하게 벌어져, 여전히 노출되지 않은 전세사기 위험이 상존한다”며,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거래 정보와 피해접수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신속히 수사의뢰 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수사의뢰 관련 통계

□ 전세사기 의심거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

구분	서울 강서	경기 화성	인천 부평	인천 미추홀	서울 양천	서울 금천	서울 구로	서울 관악	세종	경기 수원	경기 부천	경기 성남	인천 남동	기타	합계
거래 건수(건)	365	176	132	158	76	64	87	50	105	47	34	29	31	184	1,538
보증금 합계(억원)	887	239	219	202	184	135	125	123	112	71	64	50	39	303	2,753

□ 전세사기 의심자 신분

구분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임대인	건축주	분양/ 컨설팅업자	대리인	대출 관계자	모집원	기타*	합계
인원	427	266	161	120	33	5	4	18	1,034
비율	41.3%	25.7%	15.6%	11.6%	3.2%	0.5%	0.4%	1.7%	100.0%

* 기타: 공인중개사 겸 대리인, 중개보조원 겸 대리인,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 임대인 겸 건축주, 임대인 겸 중개보조원 등

보도시점

2023. 7. 25.(화) 조간

누리망·방송

2023. 7. 24.(월)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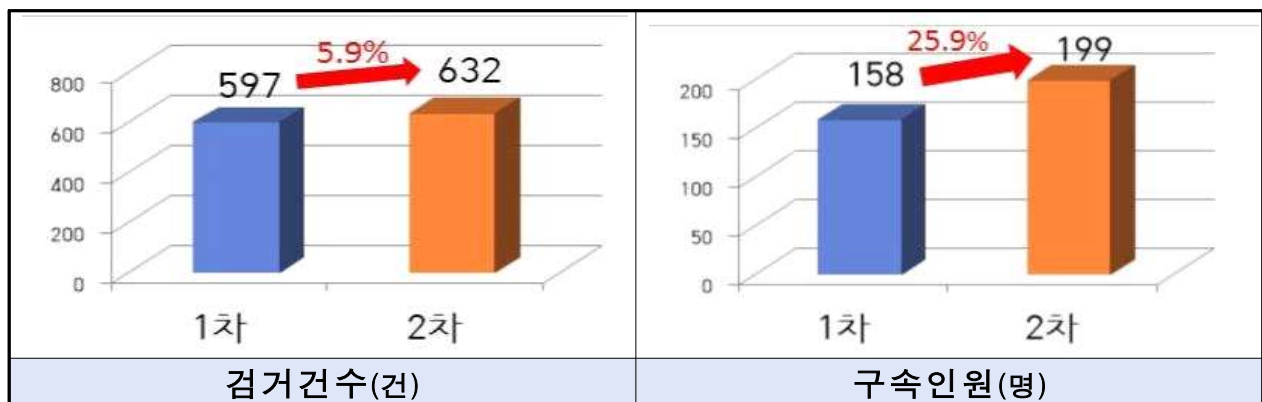
「전세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 결과 발표

- 전세사기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 등 최초 적용하여 엄단하고, 1차 단속 대비 범죄수익보전 3,040%↑, 검거건수 5.9%↑, 구속인원 25.9%↑ -
- 1·2차 단속 12개월간, 전세사기 34개 조직 3,466명 일망타진(구속 367) -
- 국토부·검찰과 합동단속 5개월간(~12. 31.) 연장, 연말까지 전세사기 척결 추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올해 1월부터 6개월('23.1.25.~ 7. 16.)간 전국적인 강력한 2차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632건·1,536명을 검거하고 199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1차) '22. 7. 25. ~ '23. 1. 24. / (2차) '23. 1. 25. ~ 7. 24.

< 「전세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 현황(1차 단속 동기간 대비) >



※ 동기간 대비를 위하여 1차 '22.7.25~'23.1.16, 2차 '23.1.25~'23.7.16 기간으로 집계

1·2차 단속 12개월간('22. 7. 25. ~ '23. 7. 16.) 총 1,249건·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1,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갱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하였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629명도 검거하였다.

※ 붙임 1 ‘전세사기 단속 현황('22. 7. 25. ~ '23. 7. 16.)’ 참조

이번 2차 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등 4대 유형* 근절에 노력하여,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의율하여 엄단하였다.

< * '전세사기 4대 유형' 검거 인원 >

구 분	악성임대인 등	전세자금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
명	1,019(+456)	1,706(+644)	629(+379)	42(+42)

※ 괄호 안은 '전세사기 2차 단속' 시 검거 현황임

구체적으로는, 기존 불법 전세관행에 관여한 불법 중개행위자 뿐만 아니라 △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을 검거(5. 19.)하였고, △ 무자본갭투자 사건에서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하여 보증금 및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추가 확인하여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7. 19.)하였다.

※ 붙임 2 '전세사기 주요 검거사례' 참조

또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범죄수익 보전도 적극 노력하여 1차 단속 대비 3,040% 증가한 172.7억원*을 몰수추정보전하였다.(법원 인용 기준)



* △ 범죄단체조직등(149.9억), △ 사문서위조(12억), 부동산실명법위반(9.8억), △ 업무방해(1억)

※ 추가로 509억 상당(거래가액) 부동산 등에 대해 범죄수익보전 진행 중(검찰 청구 기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5,013명, 피해금액 6,008억원이다. 세부유형으로는 연령별은 '20대·30대 57.9%', 주택유형별은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 82.4%이며, 1인당 피해금액은 '2억원 이하'가 76.2%로 가장 많았다.

※ 붙임 1 '전세사기 단속 현황('22. 7. 25. ~ '23. 7. 16.)' 참조

아울러, 경찰청은 기존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 전세사기 수사의뢰에 대한 집중 수사 등을 위해 국토부 및 검찰청과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엄정한 단속을 유지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국토부,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연말까지 전세사기를 뿌리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붙임 1

전세사기 단속 현황('22. 7. 25. ~ '23. 7. 16.)

- (단속현황) 총 1,249건·3,466명 검거(구속 367명), 669건·2,536명 수사 中
 - － △ 13개 ‘무자본·갭투자’ △ 21개 ‘전세자금대출사기’ 조직 검거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구속(명)	피해금(억)
1,249(+632)	3,466(+1,536)	367(+199)	6,008(+3,673)

※ 팔호 안은 1차 단속종료 후 ‘전세사기 2차 단속’ 추가 검거현황임

⇒ 「범죄단체(집단)조직죄」 적용 · 검거 :

△ 무자본갭투자 7개 조직(서울 금수대 · 사이버대 · 성북署 · 동대문署, 인천 반부패, 광주 반부패, 경기北 구리署) 및 △ 전세자금대출사기 3개 조직(서울 중랑 · 양천署, 경기南 부천원미署)

- 범죄유형별 검거인원

합계	무자본 갭투자	강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권리관계 허위고지	無권한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 · 보험	불법 중개
3,466	600	272	147	100	12	1,706	629
100%	17.4%	7.9%	4.2%	2.9%	0.3%	49.2%	18.1%

※ 불법 감정행위 42명은 7. 19. 검거되어, 7. 16. 기준 검거 통계에 미포함

- 피의자 신분별 검거인원

합계	(가짜)임대인 · 임차인 등	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임대인·소유자	브로커*	건물관리인	건축주
3,466	1,534	674	545	373	277	63
100%	44.3%	19.4%	15.7%	10.8%	8.0%	1.8%

* 브로커: ‘무자본 갭투자’, ‘강통전세’ 등에 가담한 부동산컨설팅업자, 중개인 등

- 시도청별 검거현황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南
검거건수	1,249	160	90	87	94	18	37	96	9	306
검거인원	3,466	666	310	140	415	115	98	276	29	747
구속인원	367	72	27	14	41	9	16	49	4	66
		경기北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9	20	30	37	7	13	58	93	15
		198	30	63	42	7	55	114	134	27
		19	2	8	0	1	8	10	19	2

○ 몰수·추징보전 현황

합계	범죄단체·집단조직죄	사문서위조직	부동산실명법위반	업무방해죄
178.2억	149.9억	17.5억	9.8억	1억

○ (피해현황) 피해자 5,013명, 피해금액 6,008억(송치 기준)

< 피해자 연령별 현황 >

합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법인
5,013(명)	1,195	1,708	885	361	200	41	623
100%	23.8%	34.1%	17.7%	7.2%	4.0%	0.8%	12.4%

< 피해 금액별 현황 >

합계	5천만원 이하	5천만~1억원	1억~2억	2억~3억	3억이상
5,013(명)	586	1,345	1,889	972	221
100%	11.7%	26.8%	37.7%	19.4%	4.4%

< 피해 주택유형 현황 >

합계	다세대주택(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5,013(명)	2,494	828	1,637	54
100%	49.7%	16.5%	32.7%	1.1%

< 무자본갭투자 유형 >

① (서울청·금융범죄수사대) '16. 1월 ~ '21. 12월 부동산 임대법인을 운영하면서 매매·전세를 동시진행하여 임차인 344명 상대 보증금 총 694억 편취한 피의자 31명 검거(구속 3) ※ 범죄집단조직죄 의율

② (서울청·사이버수사대) '21. 8월 ~ '22. 12월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매매·전세를 동시진행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5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355억 편취한 공인중개사 및 바지임대인 등 9명 검거(구속 3)

※ 범죄집단조직죄 의율

③ (서울청·성북경찰서) '19. 8월 ~ '21. 10월 건축주, 분양대행사 등이 공모하여 바지임대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차인 86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258억 상당 편취한 피의자 21명 검거(구속4)

※ 범죄집단조직죄 의율

④ (광주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0. 4월 ~ '20. 12월 바지임대인에게 허위로 매매한 후,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108명 대상 보증금 286억 편취한 피의자 25명 검거(구속 3)

※ 범죄집단조직죄 의율

< 전세대출자금 편취 유형 >

① (경남청 · 광역수사대) '19. 9월 ~ '23. 1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는 주택을 매수한 뒤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대출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총 27억 편취한 총책 등 52명 검거(구속 11)

② (경기남부청 · 강력범죄수사대) '21. 3월 ~ '23. 1월 금융기관 등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제출, 총 31억을 편취한 피의자 27명 검거(구속 4)

< 불법 중개 · 감정 유형 >

① (서울청 · 금융범죄수사대) '21. 1월 ~ '23. 3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중개대상물을 자격없이 표시·광고하여 전세사기 무자격자, 임대인 및 중개 플랫폼 운영자 등 141명 검거(구속3)

② (서울청 · 금융범죄수사대) '22. 1월 ~ '23. 2월 대가를 수수하고 감정평가액을 높여 전세사기 대상 빌라 등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 감정행위에 연루된 감정평가사 22명 포함 42명 검거

보도시점 : 2023. 7. 24.(월) 15:00 이후 (7.25.(화) 조간) / 배포 : 2023. 7. 24.(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연장하여 전세사기 근절

- 검·경·국토부는 특별단속을 연말(12. 31.)까지 연장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전세사기 범죄 발본색원
- 「전세사기 전담검사」의 책임수사로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여 엄벌

□ 대검찰청은 경찰청·국토부와 함께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연말(12. 31.)까지 연장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한다.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1차 '22. 7. 25.~'23. 1. 24. / 2차 '23. 1. 25.~7. 24.

○ 검찰은 ‘형사절차의 쏠 과정’에서 전세사기 범행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23. 1. 18. 검·경·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여 ‘수사효율성’을 제고해 왔다.

* 7대 권역 :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 지방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 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기소·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은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관련 사건의 모든 “구속영장 심문”에 참여

○ 또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하여 기소하는 한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 구속하거나 공범, 여죄를 입건하였다.

○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있다.

* 성남지원 징역 15년(피해자 110명, 피해액 123억 원) / 서울중앙지법 세모녀 사건 징역 10년(피해자 85명, 피해액 183억 원, 추가 사건 별건 재판 계속 중) 각각 선고

□ 검찰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국토부 등과 빈틈없는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유기적·지속적으로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경찰 신청 구속영장에 대한 전담검사의 구속 심문 참여 주요 사례

- △ 빌라왕 배후 사건[서울중앙지검] : 주범 2명 구속
- △ 세신사 빌라왕 사건[서울중앙지검] : 주범 1명 구속
- △ 강서구 빌라왕 사건[서울중앙지검] : 사망한 빌라왕 공범 3명 구속(수사 중)
- △ 강서구 일대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 사건[서울중앙지검] : 주범 2명 구속
- △ 강서구·양천구 무자본 갭투자 사건[서울중앙지검] : 주범 1명 구속
- △ 금천구 무자본 갭투자 사건[서울중앙지검] : 주범 1명 구속
- △ 공인중개사무소 전세사기 범죄집단 사건[서울중앙지검] : 주범 3명 구속
- △ 부동산컨설팅업체 전세사기 범죄집단 사건[서울중앙지검] : 주범 3명 구속
- △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인천지검] : 법원 기각 후 재신청 통해 주범 1명 구속
- △ 동탄 광통 오피스텔 사건[수원지검] : 임대인 부부 등 3명 및 공인중개사 부부 2명 구속
- △ 구리 무자본 갭투자 사건[남양주지청] : 주범 1명 및 주요공범 2명 구속(수사 중)
- △ 안동 신탁재산 전세사기 사건[안동지청] : 공인중개사 2명 구속
- △ 부산 담보신탁 악용 사건[부산동부지청] : 주범 1명 및 공인중개사 2명 구속

□ 검찰 수사·기소 및 공소유지 주요 사례

- △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 경찰 수사단계부터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주범을 구속하고, 송치 후 공인중개사 등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보완수사하여 공인중개사 2명, 중개보조원 1명 등 총 3명을 직접 구속하는 등 4명 구속 기소, 31명 불구속 기소하고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최초 의율(18명), 현재 1심 재판 중 [인천지검] ※ 피해자 533명, 피해액 430억 원 상당
- △ 구리 지역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 사건
 - 경찰에서 임대업체 대표를 구속하여 송치한 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었던 업체 간부직원인 주요 공범 2명을 직접 구속하는 등 5명 구속 기소, 21명 불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중 [남양주지청] ※ 피해자 932명, 피해액 2,446억 원 상당
- △ 조직폭력배 관여 대전 지역 전세사기 사건
 - 경찰 수사단계에서 건물의 실소유자인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 송치한 후 면밀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조직폭력배 출신 건물 실소유자 2명과 전세사기 설계자를 직접 입건하여 구속하는 등 5명 구속 기소(3명 직접 구속), 3명 불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중 [대전지검] ※ 피해자 98명, 피해액 83억 원 상당

△ 경기 광주 법정최고형 선고 사건

-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후 다시 인근 빌라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빌라를 매입하여 피해를 확산시킨 주범을 기소하여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구형, 1심 징역 15년 선고 [수원성남지청, 성남지원 2019고단20 등 병합사건, 항소심 계속 중]
- ※ 피해자 110명, 피해액 123억 원 상당

△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여 무자본 갥투자자를 직구속한 후 피해자 219명, 보증금 497억 원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히고, 공모한 분양대행업자 4명을 입건하여 기소(2명 구속), 현재 1심 재판 중 [서울중앙지검]
- ※ 피해자 355명, 피해액 795억 원 상당 / 무자본 갥투자자에 대한 1차 기소 사건 징역 10년 선고(현재 추가 피해자에 대한 별건 재판 계속 중)